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전당대회서 세 과시

강성 원외모임… 최대 계파 부상
이달말 후보 공개지지 여부 결정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조사 진행
당 내부, 개입 비판 “파벌 해체를”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강성 친명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8·1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과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내거나 공개 지원 방침을 검토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혁신회의’의 전대 개입 움직임에 대해, 계파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혁신회의는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밀어줄 후보는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경선에 진출한 8명 중 혁신회의 소속은 전현희·강선우·민형배 의원 등 3명이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상무위원회 등을 열어 이달 말에는 공개 지지 선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회의는 최고위원 예비경선 전, 자체적으로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민석 의원이 1위를 기록했는데, 나머

지 순위는 비공개했다. 시·도당위원장은 자파 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선이 치러지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선 혁신회의 소속의 후보 대 현역 국회의원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도당부터 8월 17일 서울시장까지 시·도당 당원대회를 열고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다.

경선 룰은 기존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각 50%에서 ‘권리당원 80%, 대의원 20%’로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당원대회는 8월4

일 열린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재선의 주철현 의원(여수갑)으로 사실상 단일화 된 반면, 광주시당 위원장은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과 원외 인사인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맞붙는다.

양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이 공개 지지하고 있고, 강 상임대표는 혁신회의를 중심으로 강성 친명 당원들이 지지하는 형국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다.

당내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에 대해 “특정 조직이나 강성 지지층이 전당대회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파벌은 해체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일 이재명 대표와 5선 중전 연석회의를 할 때, 이 대표에게 ‘김대중 대통령도 절대 동고동계 파벌을 조성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파벌 해체를 건의했다”면서 “당 대표로서는 자제를 시키는 것이 당을 통합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연기 “집중호우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외부 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실 역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처하

겠다 판단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별 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광주시당, 윤 대통령에 헌법정신 수호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7일 제76회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을 수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의 제일 수호자이며 헌법에 기반한 통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국민에게 부여받았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의 제일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비판 언론에는 방심위,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탄압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범죄혐의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봐주면서 정적들에게는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도 맞지 않는 논리를 들이대며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식 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장면을 되새겨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바랐다”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전진숙 “광주의료원 설립해 중증환자 사망률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3차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의료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향후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법안 등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선관위, 공공기관·학교 토론사업 지원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와 토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성숙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토론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내용은 토론대회 사업후원·운영지원이며, 이외 단체와 협의 후 필요사항을 지원

할 계획이다. 토론대회 등에 관심있는 단체는 오는 10월까지 광주시토론회에 전자우편이나 유선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다.

광주시선거방송토론회 관계자는 “토론대회 개최 지원으로 올바르게 성숙한 토론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전직 국회의장 한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국회의장 등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국 “나경원, 한동훈에 공소 취소 요청… 모두 수사 대상”

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폭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7일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법무장관 시절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CBS 국민의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나 후보에 공소를 퍼면서 충격 폭로를 했

다”며 “나 후보가 한 후보의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형사건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공정과 정의 운운하며 이려고 살았는가”라며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다. 한 후보도 당시 이런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나 후보는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나 후보는 “실질적으로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하반기 첫 회의

업무보고 청취·조례안 등 안전처리
박문옥 “지방의회 권한 확대 노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하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시작으로 전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전을 상정·의결했으며,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순천1)은 “실·국을 확대 개편 등 조직권을 강화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응해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

게 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숙경 위원(순천7)은 “국내외 지방의회의와의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류 국가를 늘리고 국가별 담당 의원을 배정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박경미 위원(광양4)은 노후 PC 교체, 책마루 공간 재배치 등에 대해 질의하며 “청사 및 집무환경 기능 보강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임형석 위원(광양1)은 “의원 입법 활동 지원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진 위원(나주1)은 “상임위원 백서

제작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5분 발언 및 촉구건의문 등의 처리결과와 활동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문옥 위원장(목포3)은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시스템 개선, 실효성 있는 의회 홍보를 위한 주요 인터넷 포털과의 업무협약 추진, 지역 업체의 많은 참여를 위한 수의계약 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에 맞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